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통합하여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이 강 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 워싱턴대 경영행정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 박사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자원기술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석탄산업과장,
창업지원과장, 아주통상과장, 법무담당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석탄공사 사장
현 19대 새누리당 원주를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전의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의 핵연료 물질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중간 저장 단계를 통해 방사능을 낮추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시급한 중간 저장 시설 건설

현재 23개 원전에 설치된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13,000여톤에 이른다. 이미 임시 저장 시설 용량의 70%를 넘어서고, 지금도 연간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임시 저장 시설들은 2016년 고리 원전부터 2018년 월성 원전, 2019년 영광 원전, 2021년 울진 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나마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에 있어 기대가 크다. 이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이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고, 부지 확보에만 19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경주방폐장의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중간 저장 시설 건설 논의를 늦출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 역시 과거에 비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타에너지원보다 월등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강후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 (2013. 4. 22)

한 원전을 사용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2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한수원 원전 부품 위조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왔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지난 4월 22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국내 방한시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평가해 달라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미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원전의 관리 능력과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므로 앞으로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기 원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빌 게이츠 회장의 이번 방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팽배해진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 구성 필요

바람직한 공론화의 추진 방향은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원전 선진국 중 다수 국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정책 결정 단계 초기부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 덕분이다.

이에 정부는 시민 단체와 학계,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도 중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전 현안에 균형감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원전의 혜택 속에 살아왔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로서 이제는 원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필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원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현실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룬 원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